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몫”

《통일시대의 북한학》 펴낸 강정구 교수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난한 처지에 꿈도 못 꾸었다. 그래서 나 혼자 다짐했다. 10년만 돈벌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겠다고.”

강정구(52, 동국대 사회학과)교수는 늦깎이 학자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10년만에 부장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학문을 위한 학문, 실천을 외면한 학문,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학문은 지식인이 자기 아성을 쌓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학문의 출발점이 세상의 이런저런 풍파를 몸으로 겪고난 후이기 때문일까. 그는 상아탑 속에 갇힌 창백한 ‘학문’을 지양한다.

실천적 학문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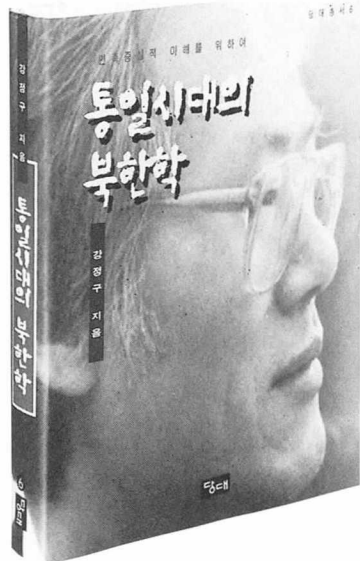
강교수가 최근 펴낸 《통일시대의 북한학》(당대)은 그의 학문적 관심이 바로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이땅의 현재에 놓여 있음을 잘 말해준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북한 바로 알기’를 위한 실천적인 제안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북한사회를 연구해야 하는가. 강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북한은 민족자주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의 핵심적인 과제를 실현시키는 객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나 내부 식민지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닙니다.”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의 과제를 이루기 위한 ‘실천행위’와 연결되는 목적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책의 부제인 ‘민족중심적 이해’는 강교수의 연구태도와 방법론의 핵심이다. 기왕에 진행된 북한학 연구태도를 시기별로 검토한 후 강교수는 최근 북한사회를 둘러싸고 유포(?)되고 있는 몇가지 ‘담론’들을 재검토한다.

가령, 김일성 주석 사망후 나도는 권력공백설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김 주석 서거 후 한 달 이내에 북한은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에 임하여 기존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나하는 문제를 제기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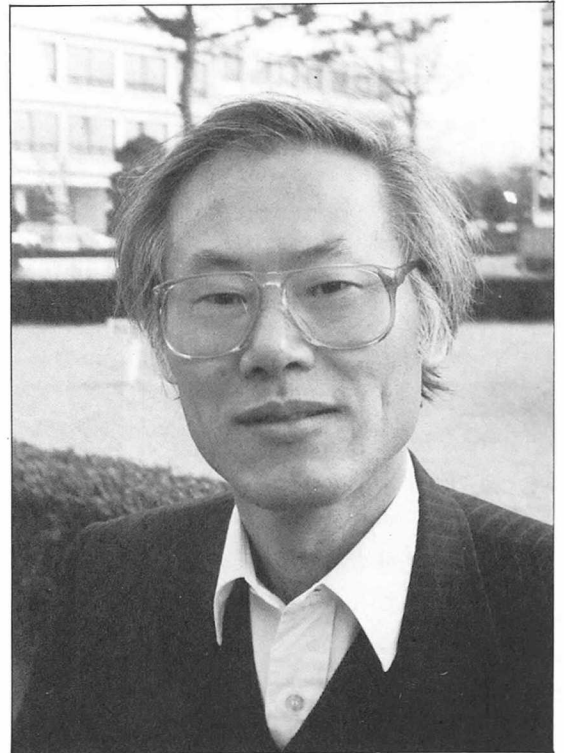


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구호물자를 군량미로 대체하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설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역사상 전례가 없이 외부세계에 구호요청을 했을까?”하고 반문해본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한 무정견한 정책은 미국이나 국제기구에 우리 민족의 생존을 떠넘긴 것은 아니었던가고 비판한다.

강교수는 90년대를 ‘통일시대’로 파악한다. 탈냉전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 세계화 구도 등 세계질서의 새로운 개편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강요하던 외적 조건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질을 ‘분단비용’에 저당잡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통일은 당위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다.

이러한 배경하에 강교수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상호보완한 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접목’이 그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통해 정치·군사부문의 일괄적인 타결이 선행된다면 여타 영역에서의 타결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연방주의적 접근’을 주로 하고 이에 경제·기술교류와 협력의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능적 상호의존관계가 성립되면 공동의 통합이익이 산출되고 이것이 두 사회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기능주의적 방법’을 보조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통일의 핵심과제를 실현시키는 객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통일사업의 중요한 몫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결코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 교수

“‘단기적 흡수통일’은 상호 자발적 협동에 의한 기능적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못해 내부식민지화로 귀결되어 엄청난 통일비용과 충격, 상대의 정치이념을 타살하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흡수통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공동체지향의 통일과도 무관하며 통일비용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주통일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흡수통일’ 예방해야

통일이 우리 민족의 과제인만큼 통일을 위한 노력 또한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성원 모두의 몫이다. 때문에 통일사업에 정부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강교수의 생각이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통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미국 유학시절, 국내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자료들을 접하고 한국 현대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는 미군 점령기의 남한과 필리핀,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분석한 《좌절된 혁명》을 박사학위 논문이자 첫 저서로 내놓았다. 식민지 시대의 가장 뼈아픈 희생자였던 민중이 해방을 맞이하고서도 어떻게 다시 소외되었는지를 밝히는 한편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 책을 쓸 때,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세균전에 관한 자료를 접하고 강교수

는 울분과 분노로 뒤범벅되어 혼자서 많이 울었다. 《프랑스 혁명사》 3부작에서 수많은 파리 노동자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대목에서도 그는 울었다.

강교수의 학문과 삶의 맨 밑자리에 ‘민족’과 ‘민중’에 대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강교수는 민중의 애환이 절절히 녹아 있는 한국민요 듣기가 취미다. 그리고 함께 학문의 길을 가는 아내와 가사노동을 철저히 분담한다. 아니 그의 몫으로 남는 일이 더 많아지기 일쑤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강교수는 세상돌아가는 꼴이 마뜩찮으면 격격탄을 밖으로 터뜨려서 튀거나 부딪치지 않고는 못견뎈다. ‘한국산업사회연구소 회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 그가 맡았던 직함은 그의 실천활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현재 안식년을 맞아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 한국학연구소 초빙교수로 활동중인 강교수는 민족사적 맥락과 민중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각종 강연, 발표, 토론을 통해 서구 학자들 및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50주년에는 80년대 이후 학계의 진보적 성과들을 갈무리해 단행본을 영어로 펴낼 작정이다.

—박남정 기자